

시론

불 꺼진 목포 도심,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남경제연구원장

최근 오후 8시50분께 목포역에 내려다. 여객선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오전 5시 신안군 하의면 옥도로 떠나는 배를 탈 요량으로 그랬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목포 구도심은 말 그대로 '불 꺼진 도시'였기 때문이다.

목포역 앞 교차로 주변은 어두웠다. 건물 대부분은 불이 꺼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안됐다. 택시 승강장도 한산했다. 예전 기억을 되살려 코롬방제과점을 찾았다. 주인은 막 문을 닫을 참이었다고 말했다.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고 했더니 저녁엔 손님이 없어 이 시간이면 닫는다고 했다. 택시를 잡아타고 여객선터미널 근처로 갔다. 여객선터미널 근처도 어둡긴 마찬가지였다. 식당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저녁을 먹을 만한 식당은 손꼽을 정도였다. 필자가 묵은 작은 모텔 근처는 더 어두웠다.

목포 도심은 왜 불이 일찍 꺼졌을까. 한마디로 못살기 때문이다.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목포는 전국 시급 도시 중 면적 규모(50.1㎢)로 하위에서 여섯 번째다. 작은 면적에 사람들은 비교적 많이 산다. 인구 순위는 전국 시급 도시(85개)에서 중하위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비슷한 인구를 가진 도시와 비교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주민등록인구(2023년 5월) 기준 목포(21만5천33명)와 충주(20만7천974

명)를 비교해 보면, 지역내총생산(2020년 지역내부가가치)은 목포 4조1천8억원, 충주 7조7천800억원이다. 편인점수(2022년 9월 기준)는 목포 201개, 충주 240개다. 목포 경제가 내륙 도시 충주보다 못하다.

목포가 동급의 다른 도시들보다 못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나 카레나 법칙처럼 이유가 많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도시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이 갖는 공간론이 있다. 면적이 작은 도시는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지을 땅이 부족하니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작은 면적이 주는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없을까. 방법은 많다. 손쉬운 방법이 배후 지역을 넓게 쓰는 것이다. 일명 남의 동네 운동장을 자기들 운동장으로 쓰는 방식 말이다. 특화된 경제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좋은 기업, 학교, 쇼핑시설, 관광지가 있으면 배후 지역 사람들이 그 도시로 와 돈을 쓰고 간다. 주변 배후 지역과 교통망이 잘 갖춰지면 금상첨화다. 목포는 개화기 초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그렇지 못했다.

물리적 공간의 협소성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정구역 통합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처럼 도시도 주변 도시와 합치는 것이다. 범위의 경제가 만들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좋다. 도시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목포도 무안과 신안과 진즉 합쳤더라면 가능했다. 하지만 목포는 그 정적의 길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목포에서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 목포와 신안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통합 연구를 해보자는 발대식은 목포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목포라는 지역사회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다. 일본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통합 실패 사례다. 지역사회 정치지도자들과 로컬 정치인들은 일차 단계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두 번이나 실패했다. 오히려 오사카 시민들이 통합을 반대했다. 핵심적 이유는 '통합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무관심과 무신경이 내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론자들이 읽지 못했다.

목포와 신안 통합 논의도 마찬가지다. 신안 사람들에게 통합이 되면 복지와 도시적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설득하면 잘 먹힐까. 더구나 신안의 많은 노령층이 통합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고, 물에 나가 사는 우리 자식들도 못살고, 목포라는 도시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목을 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목포와 신안의 통합 논의는 신안 사람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목포 사람들은 면적의 협소성이 임태하는 악순환의 불리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신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이번 통합논의의 핵심도 목포 사람들이 신안 사람들 속내를 세심하게 읽고, 그들을 배려하는 양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합을 시도할 때 여기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 일 말이다.

목포라는 지역사회가 배후 지역 사람들 마음을 얻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목포 도심을 불 꺼진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社說

프로야구 성지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난 무등경기장

프로야구 등 지역 야구 경기의 산실 무등경기장이 다시 시민 품에 안겼다. 기존 본부석을 교체하고,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1천37면을 조성했으며 아마추어 야구장과 클라이밍장, 산책로, 조깅트랙,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춘 것이다. 철거 위기에서 리모델링을 거쳐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스포츠테마공원으로 재개장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광주 7개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를 초청, 이벤트도 마련했다.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무등경기장은 1965년 부지면적 3만6천200㎡ 규모로 46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됐다. 1977년 58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증축, 시설을 보강한 뒤 무등경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와 KIA 타이거즈까지 홈구장으로 어림잡아 1천만명이 넘는 전국의 팬들이 찾았다. 대망의 한국시리즈 열 차례의 우승과 '효랑이' 김용용 감독을 비롯해 김봉연, 김성현, 선동열, 이종범 등 걸출

한 스타를 배출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택시와 시내버스 100여 대가 집결, 차량 시위를 벌여 5·18 사적지 제18호로 지정됐다. 암울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 시민들은 망국의 설움을 달래준 '목포의 눈물'을 목청껏 부르며 가슴 속 울분을 토해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응원가, 흡사 처절한 진혼곡이었다. 하지만 챔피언스 필드가 신축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는 더 열리지 않았다.

무등경기장은 야구장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광주 뿐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성지로 꼽혔다. 해태의 상징 '검빨(검정과 빨강) 유니폼'은 전국을 호령했다. 이제는 추억을 안고 시민과 아마추어 야구인,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까지 아울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으로 거듭난다. 프로야구 경기 시 고질적인 주차난도 덜어줄 전망이다.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고 시민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자람으로 계속 사랑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정난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실험대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을 준비하고 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상당의 월패스 정기권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어린이, 청소년을 무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1단계는 연간 90억원, 2단계는 1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도입 의향을 밝혔었다.

높은 부채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등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여론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한 6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혜택 요구도 분출되고 있다. 여기에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천450억, 도시철도에 640억 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전남 13개 기초단체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실시중이고, 부산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교통,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추경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정부, 국회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모든 무상복지가 그렇듯 재정과 여론 부담이 속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대중교통 요금역시 속속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높여 탄소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 도입이 맞바르는 것이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 시장과 정책협의회에서 국비를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구체화되기까지 만만찮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국가 사업으로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고

교육 공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김경훈

대중중앙초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그에 따른 위원회 회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접수된 건은 총 930건으로 지난해 709건에 비해 31% 증가했다. 특히 3월에만 건수가 122건에서 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더구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따르면 건수는 지난해 167건에서 올해 277건으로 66%나 급증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학교 업무경감 및 사건 처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를 통해서 해결한다. 현재 학폭위는 광주교육지원센터(구) 학교시설지원단에서 진행되며 관련 부서 또한 이곳에서 상주하며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학폭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심의실과 대기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늘어나

는 학폭위를 반영했을 때 현재 심의실과 대기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심의팀 추가로 인한 4개실의 공간 추가 및 재배치를 요청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무공간 절대부족과 가·피해자 동선 분리 필요에 따른 2개실의 공간 추가 및 재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지원센터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유휴공간이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해 광주교육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재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 광주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공모심사를 통해 광주교육지원센터에 시민단체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축진조례에 따르면 교육청이 사용하는 공간 중 유휴공간이 있을 때 공유가 가능하다. 당시 교육지원청의 유휴공간 또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적극 발굴·이용할 수 있는 시민 공유공간으로서 의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경미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종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 준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종결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폭위에서 다뤄진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현재 광주의 학폭위는 전반기에만 전년에 비해 66%가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부모간의 더욱 더 커진 상처와 분노로 인해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폭위 사건 접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건수 만큼 학폭위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늦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커져간다.

교육 공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공간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꼭 그렇게 돼야 한다. 네이바에서 시민단체를 검색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나온다. 특히 광주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광주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담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힘든 광주학생들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배려와 용기가 필요하다.

독자투고

도로 '무단 점령' 광고차량 규제해야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무단 광고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운전 방해 받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는 차주를 찾아볼 수 없고 차량만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해당 차들은 무단으로 세워진 광고 차량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차량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미관 저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민원에 대응해

차량을 치우더라도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불법 광고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광고스티커 부착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불법 광고로 규정하지 않는다. 번호판이 달린 주인 있는 차기에 도로에서 불법 적체물로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주정차 관리 부서에서는 차가 세워진 장소가 위반지점이 아니면 계도할 수도 없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

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명백하고 차량 이동 요구에도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규정해 강제로 처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고 차량이 도심이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강력 규제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요

**개요**

-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 발생
- 2024년 하반기 17세 이상 국민 대상 주민센터에서 발급 예정
-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

**활용**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
- 공공웹사이트 로그인
-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

**QR코드 활용에 신분확인 가능**

**보안**

- 1인 1단말기에 발급 정보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
-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 열람 불가
-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중단
-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 행정안전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